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낙마사례와 유형

2017. 6.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0년 ‘인사청문회법’ 제정되면서 부터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에서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자격과 도덕성이 논란을 넘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인사청문회 도입 등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에 국회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안 논의에 착수하여 여야 합의한 끝에 2000년 6월 관련법을 통과시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었다.

인사청문회는 행정부의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 후보에 대해 국회가 견제하고 검증하는 차원에서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인사검증 과정에서 인사 검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의혹의 정도가 상대적인 경우가 많은 좋게 임명되거나 불행하게 낙마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낙마한 사례와 유형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본론

현재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에 의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공직후보직은 약 61개에 이른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은 23명이다. 이 중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13인), 헌법재판소장은 국회동의 대상이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3인은 국회 선출대상이다. 소관 상임위원회 청문 대상은 국무위원 16인, 헌재 재판관 6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인,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등 주요행정 기관장 10인이다(【표 1】참고.¹⁾)

이 중에서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 13인, 헌법재판소장 등 후보 17인은 국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정 당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 기간, 서류제출 강화 및 국회 인사청문대상을 확대 시켰다. 즉, 법 제정 초기 인사청문 대상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가 대상이었는데, 2003년 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으로 확대했다. 이후에도 꾸준히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포함 되어 현재 국회 청문대상 고위공직은 61개다.²⁾

1) 이선우,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회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2권제1호, 2013

2) 이선우(2013), pp.23-27

【표 1】 국회 주관 인사청문 공직 직위³⁾

(2013 기준)

주관위원회	구분	청문대상 공직	직위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동의대상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 13인, 헌법재판소장	17개
	국회 선출대상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3인	6개
소계			23개
소관상임위원회	국무위원	각부 장관(특임장관 포함)	16개
	헌재재판관	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6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6개
	주요행정기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합동참모의장, 방송통신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10개
소계			38개
합계			61개

인사청문대상 확대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해 국회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의혹 등은 논란으로 이어졌고, 국회동의 대상이 아니면 부적격 시비에 휘말려도 대통령이 강행한 사례도 있었다. 국회 인사청문회과정에서 자격 및 도덕성 논란으로 낙마한 사례는 다수 있었고, 낙마 사유는 ‘코드 편중 인사’라는 이유부터 현행법 위반인 위장전입 등 다양하다.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래 낙마한 인사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김대중 정부 인사 낙마 사례

【표 2】 김대중 정부 인사 낙마 주요사례

연번	후보명	직책	낙마 사유
1	장상	국무총리	· 부동산 투기 논란 · 자녀 국적 포기 및 건강보험 수혜 논란
2	장대환	국무총리	· 부동산 투기 논란 · 위장전입(자녀) · 회사예금 담보 대출 논란

3) 이선우(2013), p.27

2) 노무현 정부 인사 낙마 사례

【표 3】 노무현 정부 인사 낙마 주요사례

연번	후보명	직책	낙마 사유 및 논란
1	강동석	건교부 장관	· 부동산 투기 · 위장전입
2	김병준	교육부총리	· 논문표절 및 중복게제 · 비전문가, 코드인사 논란
3	윤성식	감사원장	· 경력 논란(노무현 대통령 캠프 출신으로 감사원 독립성 훼손 우려) · 코드인사 논란
4	이기준	교육부총리	· 세금탈루 · (서울대 총장시절)판공비 논란/ 서울대 총장 시 LG 화학 사외인사 · 아들 병역면탈 의혹
5	이헌재	경제부총리	· 부동산 투기 · 위장전입
6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법률위반 자격논란(현직 재판관 중 소장 임명) · 코드인사 논란(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동기)

3) 이명박 정부 인사 낙마 사례

【표 4】 이명박 정부 인사 낙마 주요사례

연번	후보명	직책	낙마 사유 및 논란
1	김태호	국무총리	· 재산 축소 신고 · 부인 관용차 사용 및 도청직원 가사도우미 활용,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 등 · 거짓 해명
2	김병화	대법관	· 세금탈루 · 위장전입 · 병역면탈(아들)
3	박미석 (국회 인사청문 대상 아님)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 논문표절 · 영종도 농지 투기 · 거짓 해명
4	남주홍	통일부 장관	· 부동산 투기 · 자녀 이중국적 · 논문건수 허위신고 등
5	박은경	환경부 장관	· 부동산 투기 · 위장전입
6	신재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 부동산 투기 · 위장전입(5차례) · 부인 위장취업

연번	후보명	직책	낙마 사유 및 논란
7	이봉화	보건복지부차관	· 쌀 직불금 부당수령
8	이춘호	여성부장관	· 부동산 투기 · 재산축소 신고
9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 부동산 투기의혹 · 지위남용(제자 논문 대필)
10	조용한	헌법재판관	· 위장전입 · 부적절한 발언
11	정동기	감사원장	· 부동산 투기 · 전관예우 고액수입
12	천성관	검찰총장	· 부동산 투기 · 거짓 해명

4) 박근혜 정부 인사 낙마 사례

【표 5】 박근혜 정부 인사 낙마 주요사례

연번	후보명	직책	낙마 사유 및 논란
1	김명수	교육부장관	· 논문표절 의혹 · 연구비 부당 유용 등
2	김병관	국방부장관	· 부동산 투기 · 무기중개업체 고문 재직 중 중개수수료 수입 및 관련 사실 은폐 기도 등
3	김용준	국무총리	· 부동산 투기 · 편법 증여 의혹 · 병역면탈 의혹(아들)
4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미국 국적 논란 · 경력 논란(미 중앙정보국 비상근 자문위원 활동 등 미국의 이익 대변 우려 등)
5	문창극	국무총리	· 과거발언 논란(전직 대통령 비하 발언, 식민지배 발언 관련 등)
6	안대희	국무총리	· 전관예우 고액 수입 논란 ·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의무 위반 의혹

연번	후보명	직책	낙마 사유 및 논란
7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 부동산 투기 · 위장전입 · 증여세 탈루(장남) · 저작권법 위반 등
8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음주운전 · 자녀 영주권 취득 · 기타 청문회 중 폭탄주 회식 등
9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 논문(자기)표절 및 중복게재 · 경력 논란(대기업 변호해온 대형 로펌 출신) 등
10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 소유주식 백지신탁 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대 정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인사는 약 30명이다. 낙마 사유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우선 부동산 투기가 가장 흔한 사례로 꼽혔다. 낙마 사례 중 부동산 투기가 14건(【표 6】참고)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위장전입 8건, 세금탈루 등 재산 부당 축재 8건, 논문표절 5건, 병역면탈 4건, 경력논란, 거짓해명이 각각 3건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유로는 코드 편중인사, 전관 예우 논란, 쌀 직불금 부당수령, 연구비 유용, 저작권법 위반, 음주운전, 부인 관용차 사용 등 다양했다.

【표 6】 부동산 투기로 논란·낙마된 사례

연번	후보명	직책	비고
1	장상	국무총리	김대중 정부
2	장대환	국무총리	
3	강동석	건교부장관	노무현 정부
4	이헌재	경제부총리	
5	박은경	환경부장관	이명박 정부
6	남주홍	통일부장관	
7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8	이춘호	여성부장관	
9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10	정동기	감사원장	
11	천성관	검찰총장	
12	김병관	국무총리	박근혜 정부
13	김용준	국무총리	
14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표 7】 위장전입으로 논란·낙마된 사례

연번	후보명	직책	비고
1	장대환	국무총리	김대중 정부
2	강동석	건교부장관	노무현 정부
3	이헌재	경제부총리	
4	김병화	대법관	이명박 정부
5	박은경	환경부장관	
6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7	조용한	헌법재판관	
8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박근혜 정부

III 결론

2000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인사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인사는 약 30명이다. 낙마 사유 유형으로 가장 흔한 5가지-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병역면탈-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으로 꼽은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과거와 같이 현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용된 면이 있다. 어떤 후보는 위장전입과 같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코드 인사라는 이유로 낙마했고, 현행법을 위반했더라도 임명된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 기준에 대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생기기도 했다.

이러한 인사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선지명, 후검증’이라는 인사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기 이전 청와대 차원에서 철저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인사 검증 자료는 국회 청문회 요청 시 제출해 기본적인 사항은 지명단계에서 걸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무엇보다 고위공직 후보에 대한 명확한 인사검증 기준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른바 여야를 불문하고 집권시 ‘고무줄 잣대’로 고위공직을 임명한 관행이 고착화 되었다. 대통령 스스로 5대 비리 인사 배제원칙을 천명한 만큼 고위 공직 후보자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사 검증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